

법·제도 바꾸고 수사관행 개선...靑, 검찰개혁 칼 댔다

■문 대통령, 윤석열 총장에 개혁안 마련 지시 배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법·제도 개선과 검찰 수사관행 개선을 아우르는 대대적 검찰개혁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 에 힘을 실어주고 검찰에 자체 개혁안 마련을 주문하는 등 촛불집회에서 확인한 개혁요구 민심을 동력삼아 검찰 '대수술'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여기에는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정국의 혼란을 정면 돌파하고 국정운영 영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규모 촛불집회 전인 지난 27일 직접 법무부로부터 검찰개혁 방안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지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관행, 조직문화에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눈길을 끈 것은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대목이다. 윤 총장이 배척하지 않은 자리에서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해 '지시'라는 형태의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

조국 법무부 개혁안 힘 실어줘
검찰 스스로 개혁 나서라 압박
여론 부담 커진 검찰 대응 주목

이다. 검찰은 수사에 전념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혁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조 수석이 보고한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안,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에 대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조 장관 수사와 맞물려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빚어지지 않도록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으로부터 대검 검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사 건의를 받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인사를 통한 검찰의 '조직 개조'에도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또 최근 여론에서 검찰의 수사정부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야당과 검찰의 내통설' 언급까지 나오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한 시점에서 검찰부장 인선을 통해 조직의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이 받는 압박은 적지 않으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움직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접한 검찰이 어떤 대응을 내놓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정국이 크게 출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촛불 민심이 움직이면서 검찰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하지만 조국 장관 및 부인의 기소 등 아직 정치적 뇌관이 제거되지 않은 사안들이 많이 남아있어 상황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법무부 검찰개혁위 출범... '직접수사 축소' 1호 권고

위원장에 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 이탄희 변호사도 참여
조국 "검찰개혁 방안 신속히 제안해달라"... 매주 회의 속도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30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첫 회의 직후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1호 권고를 내렸다. 위원회는 매주 회의가 끝날 때마다 권고안을 내놓는 속도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도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검찰개혁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2006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으며, 2010~2012년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반독권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으며 검찰개혁 공약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2기 위원은 김 변호사를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로 알린 이탄희 전 판사(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김학의 사건 주심위원

을 맡은 김용민 변호사, 검사 출신으로 성범죄 등 여성 인권 관련 사건에서 목소리를 내온 오선희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천관용 시인인 기자 등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1기 위원회와 달리 검찰 내부 구성원도 위원으로 포함했다. 형사부 근무 경력의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 검찰수사관 1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입법 없이도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조국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조 장관은 "누구도 합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지난 주말 100만명이 넘는 주권자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했다"며 "지금 이 순간까지 적폐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개혁이 부족하다고 이 정부에 재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 권력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검찰 권력을 이용하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다"라며 "검찰의 문제는 검찰

조직과 권한 자체의 문제, 여기에서 비롯된 문화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논의의 지향점은 검찰 조직·문화의 변화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검찰 조직과 문화가 개혁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검찰 조직과 문화 부문에 더욱 유의해 개혁안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1차 전체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위한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하라"는 1호 권고를 내렸다. 이를 위한 관련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 인 지부서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 본연의 기능인 형사·공판부 중심을 이동하지는 취지"라며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부 검사가 열심히 일해도 승진이나 요직 발령은 20%밖에 안 되는 특수부 검사들이 독점한다"며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를 담아 검찰 조직을 개편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열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열어 개혁안건들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구성" 한국당 "검찰 겁박, 흥위병 정치"

서초동 촛불집회 공방 가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검찰과 보수 야당에 대한 경고로 규정하고 당내 특위 설치를 통해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지지 세력의 결집을 동력으로 '조국 찬반' 대립 구도를 '검찰 개혁 대반(反)개혁' 구도로 전환하면서 검찰과 야당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제1·2야당은 촛불집회를 '흥위병 정치'를 통한 여론 조작 시도라고 몰아붙이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의 각·각접적인 압박을 사법 계엄령으로 몰아붙였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하면서 조 장관과 여론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날도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인원이 집회에 참여한 것은 잘못된 검찰 수사에 대한 분노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됐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촛불집회를 거론,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그리고 이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는 일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면서 "검찰은 지금이 야말로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당내 검찰개혁 특위 구성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도 '검찰 개혁 국감'으로 명명했다.

보수 야당은 촛불집회를 지지 세력 동원을 통한 '조국 비호·'검찰 수사 방해'로 보고 강하게 성토했다. 황교안 대표도 최고위에서 "문 대통령과 친분 세력의 요

구는 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 "지금 이 정권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흥위병 정치", "극렬 지지층 총동원령", "가장 타락한 민중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주최 측이 200만명으로 추산하는 집회 참석 인원 에 대해서도 "대전 인구 150만명보다 더 많이 보였다는 것인데 판다지 소설급 뻥튀기"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관련 중언부언 여당에 압박하면서 '조국 국감'을 예고했다. 또 다음 달 3일 대규모 장외집회도 계획하면서 여권과 세 대결에도 나설 태세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원회의에서 "피의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무법천지로 만들고 대통령이 적법하장으로서 앞장서 검찰을 겁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한국표준협회 선정 2019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2018 KS-COI

클러스터품질지수 여행사 부문 1위 수상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인증

세계권위 여행전문지 TTG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18년 연속수상

산티아고 순례길

국내 유일 대한항공 특별전세기 산티아고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

최대 50만원 할인
1차 프로모션 마감임박 (~9/30까지 예약시)

동반자 할인 40만원 할인
추가 할인(4명 이상) 10만원 할인

11/9 11/16 11/23 [단 3회 출발]

4성급 호텔 알베르게 숙박 X

전문 인솔자 동행 순례길 전문 가이드

전용차량 대기 배낭없는 편안한 여행

48년의 노하우가 만든 롯데관광만의 혜택!

산티아고 순례길 + [스페인 3대도시] 9일

5일 걷기 **3,690,000원** +90유로 | 선택관광 없음
• 목시아/산티아고/피니스테레

산티아고 순례길 + [스페인 북부 8대도시] 9일

4일 걷기 **3,790,000원** +90유로 | 선택관광 없음
• 루고/오비에로/산티아고

스페인 북부 12대도시 + 프랑스 길 9일
포르투갈 8대도시 + 포르투갈 길 9일

2일 걷기 **3,890,000원** +90유로 | 선택관광 있음
• 리스본/산티아고/피니스테레

가견요항내역: 크루즈 선실로 및 항공세,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일/자세한 사항 및 일정표는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인전경비단계] ●여행유료 / ●여행자재 / ●항공권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선택경비(관광) 있음/없음 상용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지역의 경우 비지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메타]민]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여행경비는 여행일 가산계좌로만 입금되고 있습니다. ●종료구분: 일반여행업 제4678(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상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물류관리센터: 1589-8992 ●여행보험: 부산형/속초형 ●최소출발 10명 ●크루즈 2인 1실 사용(일부객실 제외) ●교통편: 항공, 버스,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표, 입장권, 숙박권 등은 판매구분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